

# 주간 통일정세

2015-02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 북한 시민당, 신년사 지지 담화..남북관계개선 촉구(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의 '올해를 민족 대단합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인용하여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를 지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였다고 보도함.
  - 담화는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체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해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전하며 "남조선의 모든 정당, 정치인들이 조국통일에 백해무익한 체제대결의 관점을 버리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흐름에 적극 합류해 나설 것을 호소"함.
  - 이어 "남조선 당국은 이제 더이상 불신과 갈등만을 부추기는 '체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과 통일애국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 10·4선언과 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함께 실천하는데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대해서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는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북한 "남한, 흡수통일·빠라 입장 밝혀라"(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7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대단합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체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며 흡수통일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남한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함.
  - 담화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미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나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하는 입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언급함.

- 이어 국내 탈북자단체가 지난 5일의 대북전단 살포에 이어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더 인터뷰' 내용 살포를 예고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남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 '체제 특성'등을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당국과 열 백번 마주앉아야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함.

■ 북한 사회단체, 신년사 지지 담화…"남북관계 개선 촉구"(1/8,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은 8일 중앙위원장 담화를 발표, "남조선 당국은 더이상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직업총동맹도 중앙위원장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느냐 마느냐 하는 책임적인 시기에 지금과 같은 도발적 망동을 일삼으며 대결을 추구한다면 달라질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통신은 보도함.
- 통신은 또한 천도교청우당도 중앙위원장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외세와의 침략전쟁연습부터 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였다고 전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북관계, 외세의 농락물 될 수 없다"(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민족자주의 길, 우리민족끼리의 길"이라고 밝힘.
- 이어 "북남관계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외세의 전쟁 책동의 농락물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고 겨레의 평화와 통일 염원을

짓밟는 매국 반역행위"라고 강조하였으며 "북과 남의 대결로 손해 볼 것은 우리 민족이고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외세"라며 민족과 외세를 구분하고 "우리 겨레는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이는 온갖 장애물을 밀어낼 것"이라고 덧붙임.

- 신문은 '애국의 기치 따라 대단결의 광장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조국통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며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면서 민족자주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단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빠라살포 남한당국 묵인…대화입장 명백히해야"(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이번 빠라살포 망동을 또다시 묵인조장함으로써 그들과 한 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하며 "최대의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이번 빠라살포 망동도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하였다면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라면서 "범죄행위에 대한 묵인은 곧 공모결탁"이라고 날을 세움.
- 이어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될 수 없다"면서 "남조선당국은 한 줌도 못 되는 산송장들의 망동을 묵인해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가겠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나서겠는가 하는 데서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통신은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인간쓰레기들의 빠라살포책동에 의해 우리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방문을 계기로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분위기가 파탄되고 북남관계가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앞으로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임.

■ 북한, '평화 분위기' 강조…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평화적 환경의 마련은 현 북남관계의 요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측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함.
- 논평은 키 리졸브·울지프리티엄가디언 등 매년 열리는 한미합동군사연습으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파괴됐다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 위협이며 침략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했으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 통일을 위해 인내를 갖고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은 실천 행동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동족대결은 파국”(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대단합, 대단결은 통일위업 실현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는데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실현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밝히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부정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한다면 남북관계의 파국 밖에 몰아올 것이 없다"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남북대화 공세...“남한 태도에 달렸다”(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대화와 협상 등) 모든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 대화가 신의 있는 대화,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성과를 거두는 대화로 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남한 정부가) 대화에 임하는 자세와 입장부터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의심부터 앞세우는 것은 진심으로 대화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최근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놓고 남한 정부와 벌이는 신경전을 이어감.
  - 신문은 또한 "통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불신을 조장하고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대담하게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인들로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함.
  
- 북한 “체제대결은 핵전쟁 부를 것...연방제통일이 최선”(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체제대결,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며 끊임없이 벌어지는 체제대결, 제도통일 소동은 골수에 찬 북침야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본요인"이라고 비난함.

- 이어 지난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도 남한의 흡수통일 정책 때문이라며 "체제대결이 종당에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줄 것은 핵전쟁의 재난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음.
  - 신문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을 거론하며 "연방제통일이야말로 상대방의 사상과 체도를 그대로 두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초래될 후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연초 있었던 육군 실전훈련과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유지 등을 비난하며 북침전쟁연습이 지속되는 한 남북 간에 신뢰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는만큼 평화와 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남측에 거듭 요구함.
- 북한 "전쟁연습과 남북대화 양립 못해"(1/11,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11일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 광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쟁연습과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민주조선은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입장이라면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 책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침략적인 외세에 추종해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 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지금보다 더 험악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北, 남북대화 재개촉구 국회결의문 접수 거부(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9일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 결의문 접수를 거부했다는 통일부의 발표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가 이날 기자들에게 "작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을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 연락관 통화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상부의 지시'라며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핵무기 소형화 상당수준…미사일, 美본토 위협"(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국방부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의 내용을 인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번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반영되었다고 전하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이번 국방백서에서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새로 평가된 점을 언급하였으나, 동시에 군의 한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하여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마. 남북 경제 관계

- 개성공단 새규정 통보후 첫 월급날…北 인상요구 없어(1/11, 연합뉴스)
  -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우리 측에 통보한 뒤 첫 임금 지급일을 맞았지만 아직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는 북측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2~20일 작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아직 과거와 다른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함.
  -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현재 월 70.3 달러이며 가급금을 포함하면 평균 150달러 수준이 되며, 기업들은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북측에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가급금이 임금에 포함되면 사회부담료 부담이 배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대북지원단체에 연하장 보내 '6·15선언' 강조(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2015년 새해를 맞아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에 연하장을 보내 6·15공동선언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8일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북측 민화협은 지난해 12월 말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에 보낸 연하장에서 "조국해방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귀 단체와 전체 성원들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를 보낸다"고 밝힘.
  - 이어 "우리는 새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더욱 높이 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연하장은 PDF파일로 첨부되어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됐으며 모두 4문장으로 이뤄져 있고, 올해 연하장은 인사말과 맺음말을 제외한 본문에서 모두 6·15공동선언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담화(1.5), '신년사 지지·찬동' 표명과 우리(南) 정부에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며 체제를 모독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행위 중지' 요구 및 '남북, 해외의 모든 불교도들이 신년사의 호소를 높이 받들어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는데 앞장설 것'을 호소(1.5,중앙통신)
- 「여맹」 중앙위원장 담화(1.9),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들을 지지·찬동한다'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남조선과 해외 여성단체들과의 다채로운 통일회합들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1.9,중앙통신)
- 「농근맹」 중앙위원장도 담화(1.9)를 통해 '신년사를 지지·찬동한다'며 '남녘의 농민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운동을 벌려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1.9,중앙통신)
-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총 위원장 담화(1.10), 남한 그리스도교 인들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일떠나설 것'이라고 주장(1.10,중앙통신·평양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미국에 제재 철회 요구...“정책전환 주시”(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날 정책국 성명에서 "해킹공격의 배후가 우리라는 딱딱한 근거도 없이 제재 소동을 벌인다면 그 보다 더한 날강도적인 도발행위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국방위는 이어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해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은 모든 대조선 제재 조치부터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밝힘.
  - 또 키 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반도에서 치러지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며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무모한 모든 적대행위를 무조건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는 언제나 강경대응을 불러오기 마련"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통신은 보도함.
  
- 북한 "한미연합훈련 임시중지하면 핵실험 임시중단"(1/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지난 9일 미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고 전함.
  - 북한은 또 메시지에서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으며, 이어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여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분단 70년을 계기로 "미국정부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제안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한미일 정보공유는 '미국의 북침야망'"(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전쟁동맹이 가동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일 3국이 체결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언급하며 "이는 손아래 동맹자를 부추겨 대조선(북한) 포위환을 형성하고 북침야망을 손쉽게 이뤄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군사비까지 줄이는 미국은 군사적 공백을 남조선과 일본의 힘을 빌려 메우려 타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남한과 일본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 돌격대'라고 비난함.
  - 이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실제 가동 중인 군사동맹'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3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3각 군사동맹의 엄중성을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있다"며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도발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CIA 고문협력' 유럽 비난... "미국 꼭두각시"(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정신을 차리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행위를 도운 유럽연합(EU) 국가를 거론하며 유럽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함.
  - 신문은 영국의 범인인도 프로그램 협력, 폴란드의 비밀감옥 운영을 사례로 들며 "유럽 나라들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너절하게 놀아냈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런 유럽동맹이 아직 유엔에서 미국의 뒤꽂무니를 따라다니며 '인권문제'를 정치화·국제화하려 놀아내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초보적인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비난의 날을 세움.
- "북한, 소니 해킹 안했다"(1/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평양발 논평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 8일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위로 전문을 보냈으며 "온갖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조선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주장함.

- 신문은 "(세계)언론들은 이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과 미국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건을 같은 문맥에서 다루면서 미국 정부의 주장을 되뇌고 있다"며 "조선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 소행설을 전면 배격하고 있다"고 강조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소니 해킹'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13687호'(1/6, 연방관보: 1/7,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6일자(현지 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인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13687'호를 부여했다고 7일 연합뉴스는 보도함.
  - 뉴스는 이어 새로운 행정명령 13687호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들을 타깃으로 하는 기존 대북제재와는 달리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과 산하 단체·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며, 기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위협행위와 인권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라고 전함.

#### 마. 대중국

- 北탈영병, 작년 말 중국서 주민 4명 살해(1/5, 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5일 북한군 탈영병 한 명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 난평(南平)진에서 민가 여러 곳을 돌며 총기를 발사해 주민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였다고 보도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은 이미 북한 측에 항의(교섭)했다"면서 "중국의

공안부문이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하였으며, 어떤 성격의 항의를 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중국 공안 부문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 외에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할 것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추가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후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후 중국 경찰은 즉각 검거 작전에 나섰으며 체포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범인은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고 설명하고, 이어 "중국은 북한 측에 항의(교섭)했으며 북한은 해당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양국 주관 부문이 법에 따라 후속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중국, 북중 관계 '16지방침' 복원 확인(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9일 중국이 북중 관계의 기본원칙이었으나 최근 양국 간 축전이나 공식문서 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16자 방침'을 공식적으로 복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함.
-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생일인 8일 저녁 홈페이지에 홍레이(洪磊) 대변인 이름으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성명을 올려 "새로운 1년을 맞아 중국은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의 방침'(16자 방침)을 토대로 중조(북중) 전통·우호·협력 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며 16자 방침을 오랜만에 거론한 것으로 알려짐.

###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 자. 기타 국가

- 북한, 태국에 상주대사관 개설 요청(1/8, 방콕포스트)
  - 위싸누 프레이응암 부총리는 문성모 태국 주재 북한대사가 7일 자신을 방문해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방콕포스트가 8일 보도함.
  - 이어 위싸누 부총리는 올해 북한과 태국의 수교 40주년을 맞아 북한이 태국과 관계를 강화하길 희망했다고 전하면서 "현재 베이징 주재 우리 대사관이 북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며 "그곳에 대사관을 개설하려면 재정 문제 등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또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이미 북한에 투자하는 록슬리 퍼시픽을 포함해 양국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신문은 전함.

- 미국은 '우리(北)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변화된 정세와 역사의 흐름을 옳게 보고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대담하게 철회할 정치적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1.6, 중앙통신)
- '韓美日이 군사정보분야에서 협력체계가 완성되면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지역을 겨냥한 전쟁공조체 제인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이 강화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는 매우 위험한 침략세력'이라고 비난(1.8, 평양방송)
-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나라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며 잘못을 묵인함으로써 미국이 갈수록 횡포해지고 있다'며 반제 자주적 나라들의 투쟁 선동(1.8,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외무상), 1월 8일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 관련 同國 외무장관에게 위로전문(1.9, 중앙통신)
-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화국의 일관한 대외 정책적 입장'이라고 주장(1.1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군 포사격대회 시찰…김여정 수행(1/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새해 첫 군 관련 공개활동으로 군 비만총포(우리의 대전차화기에 해당) 사격대회를 시찰했다고 보도함.
  - 또한 7일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운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오일정·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리영길 총참모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춘삼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운영식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현지에서 영접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새해 첫 포성으로 전군을 힘있게 고무하고 적들의 어떤 도발책동도 단호히 징벌할 수 있도록 싸움준비를 완성하는 데 (사격대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군인들을 명사수·명포수로 준비시키는 것은 조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명사수·명포수 운동을 발기한 것"이라며 "새해에도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7일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에 변인선 대신 김춘삼을 호명한 것을 두고 변인선이 작년 11월 5일까지 작전국장으로 호명됐던 점으로 미뤄 지난 두달여 사이 김춘삼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평양시버섯공장 시찰…“과학화 중요”(1/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새로 건설된 평양시버섯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黨 제1비서는 공장의 건설상태와 관리체계, 재배방법 등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생산시설과 품종 개발을 독려했으며, 그는 또 버섯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위한 연구를 강조하며 각 지역의 버섯 재배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망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함.
  - 시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한광상 당 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만성 평양시농촌경리위원장이 이들을 영접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리용호, 싱가포르서 美인사 접촉 예정"(1/10, 교도통신)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을 만나 핵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한 외교 관계자가 리 부상이 16일부터 이틀간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전함.

## 다. 공식 행사

- 북한 주민들, 남북관계 개선 촉구 대규모 군중대회(1/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6일 오후 "김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이번 군중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광범기·오수용 당비서, 로두철·김용진·리철만 내각 부총리 등 주요 당정 간부들이 주석단에 나왔으며, 민일홍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지배인, 정영숙 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문철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이 결의토론을 한데 이어 결의문이 낭독됐고, 평양 시민들의 광장 행진(군중 시위)으로 행사가 끝났다고 매체들은 전함.
  -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연설에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자"고 촉구했으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자"며 "평양시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당의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고 강조함.

- 또한 경제 분야에 대해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경영·기업 전략을 바로 세워 생산을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서 "수입병을 뿌리 뽑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자"고 다짐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 변함없이 고수할 것"(1/5,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5일 '선군정치, 병진노선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새해들어 미국의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으로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일 수 있다고 우려함.
  - 북한은 그러나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면 우리는 적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짓부수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안아올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신문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며 대북 경제제재와 인권 공세, 한미 군사훈련을 대표적인 예로 꼽으면서 냉전 종식 이후 "발칸 반도와 중동 지역의 일부 나라들"이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해 미국의 침략을 받았으며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이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덧붙임.
  - 신문은 5면에 실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필승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대남 메시지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며 남북간 화해협력을 촉구하면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라며 올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함.

- 연합뉴스는 '우리민족끼리'도 5일 평소와는 달리 대남 비난을 접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반향'의 형식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글을 여러 건 게재하였다고 보도함.

■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 준비 독려(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총공격 앞으로'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을 '대축전장'으로 규정하고 강성국가 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게 하자며 연초부터 준비를 독려함.
- 사설은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는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신이 맥박치고 있다"면서 "올해를 김정은시대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고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 관철을 주문함.
- 또한 신문은 미국 등 외부세력이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막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제국주의와 끝까지 초강경으로 맞서는 우리의 입장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올해를 김정은시대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며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백두의 혁명정신·칼바람정신으로 10월의 대축전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해 나가자'고 강조(1.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5일 비전향장기수 '고광인'의 80회 생일상 전달(1.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5일 백살 장수자 '탁영애' 할머니(남포시 와우도구역 진수동)에게 생일상 전달(1.5, 중앙통신)
- 자강도 낭림혁명사적관, 새로 발굴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구호문헌들과 사적물 및 유물들 보충전시(1.5, 중앙통신)
- '김정은 신년사' 관련 '일터와 가정, 출퇴근길 그 어디에서나 원수님의 신년사를 학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는 '영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선전(1.9,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10일 리인모(北送 비전향장기수) 부인 故 김순임 빈소에 화환 전달(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故 '김순임'(비전향장기수 리인모의 처) 장례식에서 최룡해, 김기남, 김양건 등 조의(1.10) 표시 및 리인모의 묘에 합장(1.11, 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북한 경제, 현실 반영 유연한 집단주의"(1/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8일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의 (사회주의경제의) 지향점은 현실 발전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단주의 체계의 확립"이라고 밝힘.
  - 또한 신보는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 기업체들의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방식"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함.
  - 신보는 이어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하고 객관적 경제법칙에 철저히 의거해 경제적 공간들을 옹계 이용하면서 합리성을 추구한다"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의 귀착점은 인민생활의 향상"이라고 강조함.
  - 아울러 "김정은 원수께서 작년 5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에 관한 역사적인 노작을 발표하시었다"고 밝혀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 정책이 당시 발표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노작을 토대로 추진됨을 확인함.

###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 스위스서 관광객 유치 행사(1/7, 스위스공영TV)
  - 스위스 공영TV SRF는 북한이 스위스 베른에 대표단을 파견해 오는 15일 열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함.
  - 준비위원회 대변인 아드리안 홀트는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별도 행사 공간을 제공할지를 논의한 결과 일단 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국가가 별도 부스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행사 참가자들은 어느 특정 국가를 관광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함.
  - 한편 방송은 북한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스위스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EU, 북한 사료 증산사업에 5억여원 지원"(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 어전스'가 지난 6일 "EU로부터 대북지원용 예산 48만 달러(약 5억 3천만 원)를 받아 다음달부터 황해남도에서 사료생산 증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8일 보도함.
- "미국 정부 대북지원 4년째 전무"(1/9,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소리)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올해로 4년째 중단된 상태라고 전함.
  - 라파엘 쿡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RFA에서 올해 9월까지인 2015년도 회계연도에 북한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다른 정책 안건과 연계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임.
  -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캐나다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의 수전 리치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북한에 메주콩 65t을 지원했으며 올해 북한에 대한 메주콩 지원을 200t으로 전년보다 세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보도함.

- "국제적십자사, 올해 대북지원 예산 590만 달러"(1/9, 자유아시아방송, 연합뉴스)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올해 대북지원사업 예산으로 590만 달러(약 64억 6천만원)를 책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IFRC 아시아사무소는 8일 방송을 통해 올해 대북사업은 재난관리와 보건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북사업이 진행된다고 이같이 밝혔으며, 북한은 가뭄·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북한의 보건시설과 기술도 여전히 낙후한 상태라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함.
  - 이에 연합뉴스는 올해 IFRC 대북지원 예산은 전년(560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평안도·함경남도 주민 800여만 명이 수혜 대상이라고 9일 전함.

- 평양시, 1월 6일 1만 4,000여 톤의 기름을 주변 농촌에 지원(1.6, 중앙통신)
- 성과 중앙기관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올해 첫 파철 집중수송(1.6, 중앙방송)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영양단지에 의한 나무모 생산방법' 확립(1.6, 중앙통신)
- 개성시내 협동농장들에서 1월 4일 "2천여t 니탄생산" 및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일꾼들의 1월 6일 "홍건도간석지 건설장 10만산 대발파" 등 성과 선전(1.7, 중앙방송)
- 중앙계량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나노기술이 응용된 보건음료-나노활성수"의 '제조방식, 간장질환 등 치료예방 효과' 등 선전(1.7, 중앙통신)
- 양강도 광업연합기업소, 운총강 4호발전소 건설(1.9, 중앙통신)
- 각지 「여맹」 조직들에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새해 3일간 '수십만 기름과 활창대 등 영농물자 마련, 농장들에 전달' 소식 소개(1.10, 중앙통신)
- 손광철(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지배인),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일꾼들의 올해 나무모생산 준비사업 전개결과 "기름생산, 나르기 80% 계선 돌파" 선전(1.10,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에볼라 방역 위한 외국인 격리 규정 완화(1/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외국인 격리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고 7일 보도함.



- 토켈 스티언로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에볼라 발병 국가에서 온 외국인도 중국에서 21일 이상 머문 경우 자체 공관이나 숙소에서 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
- 스티언로프 대사는 다만 "며칠 전 북한 외교부로부터 에볼라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면서 "외국인 격리 조치가 해제될 조짐은 없다"고 덧붙임.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지난해 미국 입국 탈북난민 11명"(1/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FRA)은 6일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난민입국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모두 11명으로 전년보다 3명 줄었다고 밝힘.
- 北, 군수시설 경비·국경수비 강화 12군단 창설(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북한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시로 자강도 일대의 군수시설 경비와 북·중·러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 등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했다고 보도함.
  - 또 뉴스는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명 늘어나고, 김정은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한, 13년 연속 세계 최악 기독교탄압국 지목(1/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제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즈'가 7일 발표한 '2015 세계기독교 감시대상국'에서 북한이 13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됐다고 8일 보도함.
  - 이 단체는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실이 적발된 주민은 체포되거나 공개처형을 받게 되며 기독교 신자들은 최대 3대에 걸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처형될 수 있으며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김정은 체제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마. 사회 동향

- 북한, 마식령스키장 선전...“평창올림픽 공동개최?”(12/12 조선신보; 1/4,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4일 '흰눈 덮인 마식령에 끝없이 메아리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키장이 문을 연 1월1일부터 지금까지 1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전함.
  - 또한 특히 10개 주로(슬로프)를 비롯한 기본 스키 시설은 물론 식당과 상점, 커피점 등 마식령호텔의 시설 및 봉사 수준도 부각시키며 '황홀한 세계', '희열과 낭만의 설경', '겨울철 체육관광의 멋'과 같은 표현으로 스키장을 극찬하고 "얼음의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TV도 4일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평양~마식령, 원산~마식령 구간의 버스 운행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함.
- 남한 1인당 IP주소 두개 이상...북한은 2만4천명에 하나(1/7, 워싱턴포스트)
  -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세계 IP 분포도'에 따르면 남한은 1인당 2개가 넘는 인터넷 주소(IP)를 가진 반면, 북한은 2만4천명에 한 개꼴로 세계에서 가장 적게 IP 주소를 보유한 나라로 나타남.

- WP는 "IP주소는 사회보장번호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IT 장비를 파악하는데 이용되고 있어 IT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잣대"라며 "북한의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IP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평양서 강냉이음식 전문점 인기(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북한에서 흔한 식재료인 옥수수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평양강냉이전문식당'을 소개함.
- 평양 중구역 오탄동에 있는 이 식당은 강냉이국수, 풋강냉이지짐, 강냉이찹쌀튀김, 강냉이만두, 강냉이차 등 강냉이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며, 이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것은 강냉이국수로, 강냉이로 뽑은 면을 양배추 김치물에 담가 만들어지며 고구마잎줄기, 버섯, 풋고추, 미역줄기 등을 볶아 만든 '꾸미'(고명)가 얹힌다고 신문은 전함.
- 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작년 11월 "평양강냉이전문식당 요리사들이 강냉이를 가지고 국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잘 만든다"고 칭찬했다며 이를 계기로 식당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함.

- 北 국가우표발행국, 마식령스키장('13.12.31, 개장) 소개 새 우표들(개별우표 4종) 발행(1.7, 중앙통신)
- 최근 통일거리운동센터에 종합적인 야외운동장 새로 건설(1만 5천여㎡) 및 '인조잔디 축구장·육상주로·전자오락관 및 야간조명 구비 등' 소개 선전(1.7,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리용호, 싱가포르서 美인사 접촉 예정" <교도통신> (1/10,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을 만나 핵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한 외교 관계자는 리 부상이 16일부터 이틀간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전함.
  -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6자회담 수석대표였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에 참석했음.

#### 나. 미·북 관계

- 미국 "남북대화는 장려 ... 대북제재는 변함없어" (1/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남북한 간의 대화를 장려하지만, 이것이 대북 제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를 분명히 장려해오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또 수개월간 남북간 대화가 일어나는 계기들이 있었다"고 밝힘.
  -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대북 제재는 인권 기록과 핵 야망을 포함한 몇 가지 요인들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영향을 주려면 그 같은 요인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핵문제와 관련해 "공은 여전히 북한의 코트에 있다"며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포함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북한이 이를 준수하려는 징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미국 정보수장 "북한, 추가 사이버 공격 가능성" (1/8,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7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이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역대 가장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었다고 주장함.
  - 그는 "이번 공격을 통해 북한이 별다른 대가 없이 저비용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이런 인식이 추후에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 추가 도발을 막자는 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사이버 공격과 달리 신속하게 소니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북한 경찰총국(RGB) 등 기관과 개인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결정한 이유라는 것임.
  
- 미 FBI 국장 "소니 해킹 북한P 사용 ... 北 소행 확신" (1/8, 연합뉴스)
  -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함.
  - 코미 국장은 이날 뉴욕 포드햄대학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콘퍼런스에서 "해커들이 정체를 숨기려고 가짜 서버를 사용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로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함.
  - FBI의 행동분석 부서도 소니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GOP(평화의 수호자)'가 발표한 성명과 협박문 등을 기존의 북한 해킹 사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했다고 코미 국장이 전함.
  
- 미 국방부 "북한 핵무기 소형화 구체적 증거 없어" (1/9,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추정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힘.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함.
  - 워런 대변인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몇 달 전 바로 이곳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군 사령관으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현재 북한이 그런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함.

-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함.
- 미국 정부 관계자, '北 보복 해킹' 부인 (1/10, 연합뉴스)
  -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에 대한 보복 해킹 의혹을 부인함. 9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은 지난달 발생한 북한 인터넷망 불통 사태는 미국의 공격 탓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AP통신에 밝힘.
  -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3일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청문회는 미국 의회가 소니 해킹사건에 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 절차임.
- 미 하원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발의 (1/10, 연합뉴스)
  -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됨. 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일리아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전날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관한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 (HR 204)'을 공식으로 발의함.
  - 스티브 새벳(공화·오하이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로스-레티넨 의원은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사건들은 북한의 범죄 속성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은 애초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으면 안 됐다"고 지적함.



- 미국 하원 외교위, 내주초 '소니 해킹' 청문회 개최 (1/10,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는 오는 13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0시 워싱턴DC 의회 레이번빌딩에서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의회가 소니 해킹사건에 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 절차여서 워싱턴 외교가의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북한의 위협: 핵, 미사일, 사이버'라는 제목의 이번 청문회에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그레고리 토힐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함.
  -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지금 야만적인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에 더해 사이버 공격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추가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국, 북한 제안 거부 ... "핵실험 언급은 암묵적 위협" (1/1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함.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제안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이메일로 답변함.
  - 사키 대변인은 "일상적인 한미 훈련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연결하는 북한의 성명은 암묵적인 위협(implicit threat)"이라고 규정함. 이어 "새로운 (4차) 핵실험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 강조함.
  - 한편,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측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한반도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일축함.

## 다. 중·북 관계

- 중국 "북한, 탈영병 사건에 유감 표시 … 후속 처리중" (1/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말 발생한 자국 탈영병의 중국 주민 살해 사건과 관련, 중국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일 밝힘.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후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사건은 개별 형사 안건으로, 중·북 양국이 모두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함.
  - 홍 대변인은 "사건 발생 후 중국 경찰은 즉각 검거 작전에 나섰으며 체포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범인은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고 설명함.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양국 주관 부문이 법에 따라 후속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성 허룽시 난핑진 난핑촌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북한군 무장 탈영병 한 명이 민가를 돌며 주민 4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중국 공안에 검거됨.
  
- 중국정부, 생일 맞은 김정은에 '축전' 발송 (1/8, 연합뉴스)
  - 중국정부가 8일 생일을 맞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냈다고 중국정부가 밝힘.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에게 발송한 축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조(중국과 북한)는 전통 우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양측은 최근 들어 제3차 핵실험 이후 장기간 지속한 냉각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복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김 제1위원장에 보낸 이번 축전에는 중국의 관계복원 의지가 담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됨.
  -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행사에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참석도록 하고 양측의 '전통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보냄.
  
- 중국, 중·북 관계 '16자방침' 복원 확인 (1/9, 연합뉴스)
  - 중국이 중·북 관계의 기본원칙이었으나 최근 양국 간 축전이나 공식문서 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16자 방침'을 공식적으로 복원한 사실이 확인됨.
  -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8일 저녁 홈페이지에 홍레이 대변인 이름으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성명을 올려 "새로운 1년을

맞아 중국은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의 방침(16자 방침)'을 토대로 중조(북중) 전통·우호·협력 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며 16자 방침을 오랜만에 거론함.

- 중국 외교부 등 중국 정부가 공식 문건이나 발표를 통해 대외적으로 16자 방침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임. 16자 방침은 2001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것으로 양국 친선 관계의 기본 원칙임.

## 라. 일·북 관계

### ■ 일본 외무상, 소니 해킹 강력 규탄 (1/6,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6일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소니 해킹 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감사를 표함.
-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 취재진에 "일본은 사이버 공격을 국가의 안보와 관련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케리 국무장관에게 소니 해킹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의 확고한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함. 이어 미국과 일본이 소니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계속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함.
- 기시다 외무상은 올해 일본의 2차대전 패전 70년을 맞아 일본과 미국이 계속해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기로 동의했다면서도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내놓을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함.

## 마. 러·북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바. 기타

###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연합사령관 "남북대화 효과내려면 강한 방위태세 필요" (1/8, 연합뉴스)
  -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6일 남북대화과 관련, "대화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강력하고 믿을 만한 방위태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힘.
  -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오산공군기지 방문 기회에 열린 한미 공군장병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양자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핵무기 개발 야욕을 드러내는데 연합사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느냐'는 한 미군 장병의 질문에 "남북대화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한미연합사의 우선순위에 대해 "제 우선순위는 언제나 무엇보다 우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 일원인 여러분은 항상 오늘 밤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지속 ... 北주장 이치 안맞아" (1/8, 연합뉴스)
  - 국방부는 8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한미 연합훈련 관련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한미연합체제가 있는 한 훈련은 지속해야 한다"고 밝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부대를 유지할 수가 없다. 또 한미연합체제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함.
  - 북한 국방위는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나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하는 입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 이밖에 그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이후 후속 논의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절차를 거쳐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며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 빨리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 미국 국무부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제한" (1/1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우리 검찰이 '중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강제출국시키도록 당국에 요청한 것과 관련, 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함.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대체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사키 대변인은 "신씨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정지되고 검찰이 강제출국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 정부는 미국 시민을 (영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함.

## 나. 한·중 관계

-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 한반도정세 포괄적 논의 (1/5, 연합뉴스)
  -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한·중 양국이 5일 오후 서울에서 양측 외교부 국장급 인사와 국방부 부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제2차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함.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쿵쉬안여우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안보분야 협력,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정세 등이 논의됨.
  - 동북아 정세와 관련,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됨. 한·중 양국 내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 형집행 6일만에 통보 (1/5, 연합뉴스)
  -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우리측에 5일 통보했다고 밝힘.

- 중국은 사전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했으나 정작 형 집행 사실은 엿새 만에 뒤늦게 우리측에 통보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짐.
  - 외교부는 중국이 김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과 관련,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중국,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지지입장 표명 (1/6,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올해는 조선광복 70주년으로 조한(북한과 한국) 쌍방이 신년사에서 서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선의와 적극적인 신호를 보낸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또 "중국은 반도(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 쌍방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협조·협력을 추진해 이를 통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지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북남 쌍방이 능히 기회를 잡고 성실한 조치를 취해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함.
  - 그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들어 평화통일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은은 남북간 고위급 회담에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됨.

## 다. 한·일 관계

-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 "경제협력 발전 긴밀 협력" (1/5,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은 8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열고 경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양국은 회의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양국의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정부 고위당국자는 "연초에 고위급에서 경제 문제의 모든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전체적으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많이 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함.

■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은 중대한 도발" (1/6, 연합뉴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일본 정부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중대한 도발을 한 데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함.
- 노 대변인은 "특히 왜곡된 역사를 내용으로 하는 잘못된 동영상이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더 우려스러우며 국제사회의 올바른 역사교육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함.
-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을 맞이해 올해 전쟁에 대한 반성 등의 내용을 담은 '아베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에 입각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변국과 국제 사회와의 신뢰를 쌓아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종전 70주년 계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 담화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함.

■ 정부 "日교과서 위안부 삭제, 국제사회 정면도전" (1/9, 연합뉴스)

- 정부는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술 삭제를 최근 승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국제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비난함.
- 외교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자국 교과서의 기존 기술 삭제를 승인한 것은 고노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과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들의 보고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 외교부는 "정부는 종전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새해에도 일본 정부가 이러한 우를 반복하는 경우 한일관계 개선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힘.
- 정부 "日 야스쿠니참배 정당화, 또 하나의 역사수정주의" (1/11, 연합뉴스)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국회 답변서를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데 대해 11일 "역사퇴행적인 움직임"이라며 강력히 비판함.
  -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금번 답변서에서 '다수의 국민과 유족'이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추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난 2013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과거 침략전쟁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엄중히 비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함.
  - 외교부는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통절히 반성해야 할 시점에 일본 정부가 계속 이러한 역사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주변국들과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멀어질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함.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중국, 美 대북제재에 "정세악화 조치 피하기 바란다" (1/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에 대응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관련국에 정세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함.
  -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확대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현재의 정세를 악화·격화시키는 조치를

-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또 "중국은 관련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중국 정부는 이어 대만이 새해 첫날 미국과 단교 이래 3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자국 국기계양식을 개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함. 화 대변인은 "우리는 대만 당국이 미국 주재 기구에서 소위 국기계양 의식을 거행한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에 엄중하게 항의(교섭)했다"고 말함.

## 바. 미·일 관계

- 미국, '전후 70년 아베담화에 무라야마 담화 계승 촉구 (1/6, 연합뉴스)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을 맞이해 올해 발표할 새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은 이들 두 담화에 의한 사죄는 "(한국, 중국 등)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노력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역사문제를 "이웃 국가와의 대화를 통해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일본에 촉구하고 싶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정례회견에서 "아베 내각은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언급해 왔다"면서 "미국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논평함.
- 일본 정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예산 대폭증액 (1/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오키나와(沖縄)현 미군기지 현내 이전을 위한 비용을 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함.
  - 정부는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에서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후텐마 미군 비행장(미 해병대 기지)을 같은 현 나고시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는 경비로 전년도의 2배인 약 1천500억 엔(약 1조4천억원)을 계상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함.

- 미·일 양국 정부는 주택가 주변에 위치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1996년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속에 18년간 합의이행을 못 하고 있음.

## 사.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아. 중·일 관계

- 중국, 일왕의 '전쟁 반성' 언급에 "언행일치" 주문 (1/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소감 등을 통해 '전쟁 반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일본이 언행일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함.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밝힌 태도에 주목한다"며 "일본은 오직 진정으로 과거와 대면할 때만 진정한 미래가 있다"고 말함.
  - 그는 또 "(일본이) 침략 역사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인식·대면하고, 지금까지 역사문제와 관련해 한 발언·약속을 준수하며, 역사교훈을 깊이 받아들여 평화발전의 길을 걸어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작용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임.
  - 일왕은 지난 1일 신년소감에서 올해 일본이 종전 70주년이라는 분기점을 맞아 "이번 기회에 만주사변으로 시작한 전쟁 역사를 충분히 배워야 한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아베 담화'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겠다고 말함.
- 중국·일본, 다음주 '센카쿠 협의' ... 2년 7개월 만에 재개 (1/6,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다음 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위 당국자 간 협의를 재개한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6일 보도함.

- 양국은 13일 또는 14일 도쿄에서 과장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이는 센카쿠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연락 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하자는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임.
-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협의 요구에 불응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연말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해상연락 메커니즘을 둘러싼 중·일 간 논의는 2012년 6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임.

####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탈북자 "함흥지역 3집 건너 1집 마약제조...아이들도 마약해"(1/5, 조선일보)
  -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는 5일 북한 함흥지역에서 생산된 마약이 아이들에게까지 확산돼, 북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 매체는 지난해 탈북한 김 모 씨의 발언을 인용해 "전에는 일부 상류층과 장사꾼만 마약을 했지만, 지금은 일반 주민을 비롯해 군인, 노인, 심지어 아이들까지 마약을 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 김 씨는 마약의 주요 제조지로 함흥을 꼽았으며, 그 이유를 북한의 화학공업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이 지역에는 제약화학 공장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는 기술자나 노동자들은 아편을 화학적으로 재제조하는 방법을 습득했으며, 심지어 가정집에서도 마약 제조가 가능한 기구가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지금 조선 인민의 70%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한층 강화된 공포를 불러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사망한 김정일도 마약 확산을 막고자 포고문을 하달하고, 마약 판매가 적발되면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마약 값만 올랐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 북한, 'CIA 고문협력' 유럽 비난..."미국 꼭두각시"(1/7,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정신을 차리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행위를 도운 유럽연합(EU) 국가를 거론하며 유럽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음.
  - 또한 "유럽이 위신을 회복하려면 미국에 아부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처신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어 "이런 유럽동맹이 아직 유엔에서 미국의 뒤통무니를 따라다니며 '인권문제'를 정치화·국제화하려 놀아내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초보적인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비난함.



- "북, 13년 연속 세계 최악 기독교 탄압국"(1/7,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기독교단체 오픈도어스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5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명단(World Watch List 2015)'을 발표했다.
  - 이 단체의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대표는 북한이 지난 2002년 이래 13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국가로 꼽혔다고 밝힘.
  -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에 대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얻는 게 쉽진 않지만 일부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북한의 비참한 기독교 탄압 실태는 세계 최악이라고 설명하며 북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과 제재, 또 성경책 유포 단속과 신격화된 독재자 숭배 강요 등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음.
  -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니나 쉬어(Nina Shea) 종교자유센터 국장은 지난해 여름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처형됐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소개했음.
  
- 북 인권, 김정은 정권서 더 악화(1/7, 자유아시아방송)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7일 언론발표문에서 1월 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의 생일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와 통제 등 북한 인권 탄압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함.
  - 김 제 1비서가 권력을 잡고 오히려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의 단속, 정치범수용소 운용과 참혹한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졌다고 지적했음.
  -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대해 "북한의 반 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가 늦었다"며 "현재 북한에 만연하는 인권 남용 문제는 국제사회가 나서 해결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함.
  
- 김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생일선물(1/8,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북한 전 지역의 중등학교와 육아원, 요양원들에 선물을 보냈으나, 외화부족으로 올해 2월로 계획됐던 학생교육비품 판매는 4월로 또 다시 미뤄졌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이 명절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양강도의 소식통은 "김정은의 생일을 맞으며 육아원과 중등학교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요양원생들에게 당과류와 열대과일 선물이 전달됐다"며 "도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물전달식'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 그는 비록 모든 주민들에게 생일선물을 공급하지는 못했지만 8일 하루 육아원과 중등학교, 요양원에는 돼지고기국과 명태반찬이 식탁에 오르는 등 사회적으로 의지할 곳 없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이 있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에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교육비품의 국정가격 판매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로 미뤄졌다고 함.
- 소식통들은 북한이 올해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로 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과 신발, 모자와 가방을 장마당에서 팔리는 값보다 1백분의 1 정도로 훨씬 낮(싸)은 가격으로 팔아 줄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 북 의사들 병원 떠나 장마당으로(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교육당국이 현저히 줄어드는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각 의학대학들에 입학 정원을 늘리라고 지시했음.
- 평안북도의 한 지방 기관에 근무하는 소식통은 "지난해 보건성에서 전국 의사 수를 통계 냈는데, 지금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의사 수가 현저하게 모자랄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힘.
- 현저히 줄어드는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북한 교육성은 올해부터 의대들에 특설반을 조직하라고 지시했고, 올해 4월부터 문을 열게 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의학대학과 신의주의대, 청진대의 등에 생긴 특설반에서는 약 50명의 학생이 공부하게 되며, 특설반에는 현재 의료계통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다닐 수 있고 졸업 후 해당 병원 의사로 배치됨.
- 또 의학대학 교과 과정도 3년 전부터는 6년제에서 4년제로 줄어들어 속성 과정으로 마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에 의사 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소식통은 "의사들은 보잘것없는 노임과 계속되는 사회동원, 과도한 세부담 때문에 병원을 포기하고 장사에 나서고 있다"며 "일부 능력 있는 의사들도 해임시켜달라고 떼를 써 병원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 의사는 보건성 산하 병원에 소속된 의료 노동자로, 월급은 3천~5천원(1달러 미만) 수준이고, 약초 캐기와 농촌동원 등 각종 사회노동에 동원되어야 하고 개인 명의의 병원을 차릴 수도 없음.
- 때문에 불만을 느낀 일부 의사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장마당에 나가 약을 팔고 있다는 것임.
- 또 의대를 졸업하고도 다른 직종을 택하는 간부 자녀들이 있어 의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임.

## 2. 북한 인권

- 통일부 성명...“北, 의지있다면 실천적 행동 보여라”(1/6, 연합뉴스)
  - 정부는 6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갖자고 밝힌 바 있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성명에서 남북 간 진정성 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 분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적 책무이며 남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미 부시센터, 북 인권 보고서 발표(1/7, 자유아시아방송)
  -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기념관 '부시센터'는 7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 '어둠을 가르는 빛(Light Through the Darkness)'을 발표했다.
  -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인권과 핵 문제를 연계한 정책을 제안했음.
  - 그는 식량배분의 투명성, 노동교화소에 대한 접근, 환경개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납북자 귀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핵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외교 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이외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북한의 정보통제의 벽을 뚫고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며, 미국 내 탈북자의 정착을 돕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등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도록 돕는 등의 정책 방안을 내놓았음.

■ 北 장애인 인권 개선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 열린다(1/7, 크리스천투데이)

- 밀알복지재단과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지구촌사회복지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북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이 8~9일 양일 간 진행됨.
- 이번 컨퍼런스는 8일 '북한 장애인 인권 어디에 서 있나?'라는 주제로, 9일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임.

■ 유기준, 北인권법 '여야 지도부 담판' 해결책 제안(1/8, 연합뉴스)

- 유기준(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나 별도 합의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나 상임위 차원을 떠난 지도부 차원의 담판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했음.
- 유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일정한 교감속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미 NGO, 안보리 북 인권 지속 논의 촉구(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말 북한 인권 상황을 안건으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 국제앰네스티 뉴욕지부의 니콜 비에르러(Nicole Bjerler) 공보담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안보리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휴먼라이츠워치의 파람 프리트 싱(Param-Preet Singh)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일단 북한의 인권문제가 의제로 채택된 이상 새로운 이사국이 포함된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싱 상임고문은 안보리에서 10여 년간의 북한 비핵화 논의보다 북한 지도자를 포함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가 제기된 지난 수 개월 간 북한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함.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뉴욕의 제이콥 블라우스타인 인권증진 재단(JBI: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이콥 블라우스타인 인권증진 재단의 크리스틴 브로우커(Christen Broecker) 공보담당은 유엔 안보리에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활동 목표라고 밝힘.

### 3. 탈북자

- "술 마셔도 운전 괜찮아"...탈북女 숙여 800만원 뜯어(1/5, 연합뉴스)
  -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송모(23·무직)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21·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음.
  - 이들은 지난해 7월 26일 의정부 시내에서 탈북자 출신의 A(31·여) 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음.
  - 송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A씨가 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점을 노려 술을 마신 A씨에게 "이 정도 거리는 운전을 해도 한국에선 괜찮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뒤늦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고 밝혔음.

- 미, 탈북 난민 178명 수용(1/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은 5일 갱신한 난민입국보고서에서 지난달 두 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월 한 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이후 3월에 두 명, 4월에 한 명, 7월에 네 명의 탈북자 가족이 난민으로 입국했으며, 지난 11월에 다섯 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총 15명임.
  - 미국 정부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78명임.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미국을 '원수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또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함.

####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 6. 국군포로

- "2011년부터 국군포로 귀환 없어…탈북감시 강화"(1/10, 연합뉴스)
  - 10일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었음.
  - 국방부는 국군포로 귀환 사례가 없는 배경에 대해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분석했음.
  -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제3국으로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이고 그 가족은 430명에 이룸.
  - 정부는 귀환 포로 증언 등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규모를 56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음.

## 7. 대북지원

- 남북대화 모색 속 대북 인도적 지원 속도(1/5, 연합뉴스)
  -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국내 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고구마 20t(5천200만 원상당)을 북한 신의주로 보냈음.
  -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공되지 않은 생곡물이 북한에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통일부 당국자는 5일 "투명성이 입증되는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예전보다 좀 더 유연해진 상황"이라고 말했음.
  - 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영양식과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해 온 한 민간단체는 지난해 12월28일 통일부 승인을 받고 물품 반출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시작으로 보건·농업·축산 등 총 13개 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3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될 예정임.
- 정부 "민간단체 2곳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추진"(1/6, 연합뉴스)
  - 최근 일부 민간단체가 북한에 소규모 비료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했음.

-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소규모 비료지원과 관련해서 2개 단체의 신청이 들어 와 있다"며 "이는 온실·영농자재 지원 목적"이라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정부는 온실조성 등에 필요한 정도의 소규모 비료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지원을 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대규모 비료 지원은 일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 EU, 9년간 8200만달러 대북지원(1/6,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국제협력과개발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사업에 미화 약 8천2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음.
    - 또한 2010년대 초반까지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기술 전수와 물자 공급에 치중하던 대북지원 방향이 최근 들어 북한 주민의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 대북지원금 6천900만 유로의 91%에 해당하는 6천300만 유로 즉 미화 7천530만 달러가 식량안보를 위해 지급됐으며, 나머지 600만 유로의 대북지원금은 재난 복구나 의료, 식수 시설 등의 분야에 사용됐음.
    - 가장 최근에 집행된 대북지원금은 재난복구와 예방 분야로 2013년 8월 북한의 재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해 13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했음.
    -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2015년 지원과 관련해 긴급 식량지원 대상 국가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자면서 직접적인 식량지원보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를 통한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힘.
  - 작년 국제사회 대북 지원 감소(1/7,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인도지원조정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2천 834만 달러로, 2013년의 약 6천 200만달러에 비해 약 54% 감소했음.
    - 이는 2013년 대북 지원규모가 2012년의 1억 1천 300만 달러에서 45% 감소한 데 이은 터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국가 숫자도 6개국으로 2013년의 7개국에서 줄었으며, 2012년의 19개국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 대북 인도지원에 동참한 6개국의 지원 규모는 한국이 가장 많고,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순 임.
- 유럽연합, 북한 사료 증산 사업에 38만 유로 지원(1/8, 미국의 소리)
  - 프랑스의 민간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대북 지원용 예산 48만 달러를 받아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다음 달부터 사료 생산 증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힘.
  - 이 사업의 핵심은 북한 축산업 관계자들에 기술을 전수해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3년 간 황해남도 농업대학 축산학과 교수와 학생, 시범농장 관계자 400여 명에게 사료 생산 증산 방안을 기술지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베노리엘 담당관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해 말로 끝난 황해남도 식량 지원 사업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사업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 140만 유로, 미화 175만 달러를 유럽연합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함.
  - 이 사업은 황해남도 신원군과 해주시, 벽성군 내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우유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염소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염소 사육방법을 교육하는 것임.
- 국제적십자, 올 대북사업에 590만 달러(1/8,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IFRC) 아시아사무소는 올해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의 주민 800여만 명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을 펼치기 위해 예산 590만 달러를 책정해 예산이 작년의 560여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기존의 사업들은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힘.
  - 또한 올해 대북지원 사업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지만, 사업 연장이나 추가 예산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음.
  - 올해 전체 대북 사업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재난 관리와 보건이며, 북한에서 지난해 홍수 피해가 크지 않아 특별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선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대책 미비로 재난 관리 지원 사업이 중요하는 설명을 부연했음.

- 구호 사업에 더해 자연 재해에 대한 연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국가적인 재난 대응 계획과 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함.
  - 또 국제적십자사가의 올해 재난대비와 함께 중점을 두는 부분은 보건사업으로, 위생 사업을 위해 가정용품과 식수,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고 보건과 위생에 대한 연수도 제공할 계획임.
- 미 정부 대북지원 4년째 '0'(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주의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밝혔음.
    - USAID의 라파엘 쿡 대변인은 올해 9월까지인 2015 회계연도의 해외지원 계획에 북한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음.
    - 최근 들어 북한에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재난 위험감소사업(Disaster Risk Reduction /DRR)'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개발처는 2008년 세계식량계획과 미국의 비정부단체를 통해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분배 감시와 영양 조사 등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했음.
    - 이와 관련해 쿡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다른 정책 안건들과 연계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 "북한 주민 고통 더는 인도적 사업 우선"(1/9, 미국의 소리)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열린 여성계와의 신년인사회에서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비롯해 북한 주민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북한, 대북지원단체에 연하장 보내 '6.15선언' 강조(1/9, MBN)
    - 북한의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가 2015년 새해를 맞아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에 연하장을 보내면서 연하장 전반에 걸쳐 6·15 공동선언을 언급했음.

- WFP 지난해 대북지원 역대 최소(1/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2만 7천200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해, 지난해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역대 최소였던 걸로 나타났음.
  - 이는 WFP가 애초 북한에 지원하려 했던 식량 규모의 30% 수준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일 년전인 2013년의 3만 8천 톤보다 약 28% 감소한 것임.
  - WFP는 북한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영양지원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WFP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240만 명을 대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해 결국 지난해 6월 대북지원 사업의 규모를 3분의 2수준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으로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의 수가 2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감소했음.
  - 한편, 실케 버 대변인은 지난해 마지막 달인 12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100만 명에 2천916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힘.
  - 또한 WFP는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약 180만 명에 영양 강화식품을 전달하기 위해 총 1억 3천7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9일 현재까지의 모금은 약46% 수준인 6천400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추가 기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유니세프, 북한에 불분명한 용도로 매년 24만 달러 지급(1/9, 미국의 소리)
  - 유엔아동기금(UNICEF) 평양사무소가 북한 정부에 매년 지급 근거가 분명치 않은 자금 24만 달러를 제공해 왔으며, 사업을 벌이는 상당수 지역에 대한 현장 접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 이 같은 사실은 유니세프가 자체적으로 지난 2013년 10월 7일부터 11일 동안 내부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12월에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음.
  - 보고서는 또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직원 가운데 현지인 39명이 유니세프가 직접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들은 유니세프와 고용계약이 없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유니세프 사이에도 어떠한 계약도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특히 북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직원들이 평양사무소에서 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지 채용

직원들이 유니세프 시스템에 접근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는 등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고 우려했음.

- 보고서는 현장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유니세프가 영양과 보건, 교육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208개 군 가운데 35개 군에서 유니세프 국제 감시요원의 접근이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18개 군은 유니세프 북한 현지 직원 조차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면서 유니세프도 "이들 지역에서 지원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유니세프의 대북지원 사업이 올해로 끝나지만, 북한 정부의 자료수집 제한으로 이 기간 동안 지원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단 한번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음.

■ 캐나다 NGO '올해 대북 메주콩 지원 확대'(1/9, 미국의 소리)

-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는 올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두유(콩우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메주콩 지원을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늘릴 계획임을 밝혔음.
- 수잔 리치 대표는 지난해 북한에 메주콩 65t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200t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현재 퍼스트 스텝스는 메주콩으로 남포시와 형제산 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되고 있음.
- 퍼스트 스텝스가 두유 외에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지원하는 복합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100만 포도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8일 밝힘.

■ 아가페, 북한에 스위스 치즈 제조법 전수(1/9,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의 국제구호단체인 아가페 인터내셔널은 올해 주요 대북지원사업으로 가축사료생산과 유제품 생산, 가공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 종사자를 초청해 사료 및 유제품의 생산, 가공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훈련 프로젝트를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올해 계획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일정과 북한 측 전문가의 초청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아가페는 스위스 산악지역과 과일 농장, 그리고 치즈제조소 등을



- 돌며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이런 가운데 연수기간에 방문하는 곳 중 치즈제조소도 포함돼 있어 스위스산 '에멘탈 치즈'를 좋아하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입맛을 담당할 북한측 관계자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유가공제품 지원사업 외에도 지난해까지 3년동안 추진해왔던 에너지절약형 주택 재건축 및 신축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함.

## 8. 북한동향

- 日 아사히신문의 '일본군 성노예범죄 실상' 보도에 대한 신문사 협박사건에 대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군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광종의 발로"라고 개탄(1.4, 중앙방송·노동신문/언론협박의 진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미국의 인권유린만행 공모(自國內 美 CIA 비밀감옥 허용 등)"를 주장하며 그간 유럽동맹의 對北인권 등 인권문제 취급에서 "편파적이며 선택적인 對美 추종정책 실시" 조소(1.7, 중앙통신·노동신문/정신을 차리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